

<민주노동연구원 전문가토론 2>

남북-북미관계 진단 및 한반도 평화체제 전망 관련 전문가 토론회



- 일시 : 2020. 6. 25(목). 14:00~
- 장소 : 서대문 바비엡2 교육관
- 주최 : 민주노총 부설 정책연구원(민주노동연구원)

토론회 진행

■ 사회 : 박용석(민주노동연구원 원장)

■ 주제 발표

1. 이정철(숭실대 교수) : 남북관계 위기와 대응
2. 김동엽(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남북관계 위기 평가와 북한의 예상 행동

■ 지정토론

1. 정성희(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2. 장창준(겨레하나연구센터 연구위원)
3. 손정목(4.27시대연구원 부원장)
4. 유영재(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 자유토론

남북관계 위기와 대응

이정철(숭실대 교수)

1 미중관계와 한반도 정세 전망

□ 키신저 질서의 해체와 미중 관계

- 동아시아 각국은 ‘키신저 질서(Kissinger Order)’의 해체라는 구조 전환기에 대응해 각국의 전략적 이해를 추구
 - 현상유지를 기반으로 한 동아시아 체제의 해체가 본격화되고 동아시아 모든 나라들이 외교 문제의 불안정성을 호소
 - * 한국만의 문제라고 위기의식을 고조할 필요는 없음
 - 가치, 비확산, 지정학을 둘러싼 역내 및 글로벌 현상이므로 주의 깊은 대응 요망
 - * 미중 갈등 역시 거시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신냉전’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인내력을 갖고 대응해야 함



□ 미중 관계에 대해서 중국은 일방적 조치보다는 양가적 대응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며 동아시아 영향권 확대 추구

- 미국의 코로나 책임론에 대해 중국은 압력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戰狼’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을 강조
 - 홍콩- 대만 등 원칙 문제에 대해서는 양보 불가 입장 견지
 - 양회에서 과감한 경기부양책 및 안정적 경제정책기조 유지

-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은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
 - 북중관계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는 점차적으로 증대
 - 한국이나 미국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 의존도 증대 중

□ 전환기 상황에 ‘현상유지’ 라는 전략은 가장 손 쉬운 듯하지만, 동시에 가장 리스키한 전략이고 어느 순간 사면초가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관성적 대응임

- 투키디데스 함정이나 킨들버거 함정 모두를 염두에 두고 정책 대안을 마련
- 한국 정부가 플랫폼 전략과 교량국가 전략을 제기한 마당에 그 지속가능성과 현실성 (Feasibility)이 중장기 이익 실행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임

2 남북관계 긴장의 원인과 대응

1. 북한의 의도

□ 6월 긴장국면의 근본 원인은 하노이 노딜에서 비롯된 북미 대립이지만 직접적 원인은 대북 전단 등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불만임

- 북한의 정면돌파전은 미국과의 대립에서 시작된 대외 강경책의 예고편
 - 12월 중순 중-러의 유엔 제재 완화 결의안과 중국의 대북 식량 지원, 한국의 중재 노력 등에 힘입어 북한은 특별한 행동 조치 없이 정치적 정면돌파전만 선언

○ 현재 북한의 행동은 정면돌파전의 남북관계 버전이자 군사버전임

□ 북한이 대남 비판을 직접 시작한 것은 2019년 8월 대통령 광복절 연설 직후로, 지난 해 8월 정국이 남북관계의 결정적 고비였음

- 우리 정부는 2019년 8월 정국에서 남북관계를 차순위로 배치
 - 임기 내 전작권 반환을 위해 군사연습을 강행

- 한일 대전을 중심으로 한 GSOMIA 탈퇴를 이슈의 중심으로 삼고 남북관계를 후순위로 두었음

○ 8월 이전의 대남 비판이 한국의 중재자론 비판이었다면, 8월 이후에는 한국 책임론 담론으로 변화

- 8월 이전 대남 비방은 권정근 외무성 미국국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오지랖 발언과 군사연습에 대한 비난조 성명

○ 북한은 8월 16일 내각 기구인 조평통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통령 광복절 연설을 ‘태산명동 서일필’이라며 기대에 전혀 못미친다는 비판을 표명

- 심지어 ‘삶은 소대가리도 양천대소’ 할 일이라며 막말 비난도 시작

□ 대북 전단 문제는 우리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폭발시킨 계기적 발화점이었다고 볼 수 있음

○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지 않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북한의 오래된 불만의 표현

- 판문점 선언은 별도 입법을 용이케 하는 상위 근거임을 명심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북한의 불만이 북미관계라는 근본 원인에 기인한다고 해서 대북 전단 살포가 현 상황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은 억지 논리

□ 북한은 재래식 분쟁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대남 공세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됨

○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공세에 맞대응할수록 우리는 안보-안보 부재 패러독스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

○ 전면전으로의 비화를 전제하지 않고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 형태인 그레이존 분쟁(greyzone conflict)에서 우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북한을 다룰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확실치 않다는 점에서 안보 리스크가 존재

□ 안보-안보부재 패러독스(Stability Instability Paradox)

- 안보-안보부재 패러독스는 특정 국가가 핵 보유 등 비대칭적 능력을 확보하여 강력한 억지체제를 이루었을 때 전면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안보가 확보되지만, 전면전으로 비화되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에 소규모 재래식 분쟁은 오히려 더욱 자주 일어나 안보부재(instability) 상황에 처한다는 패러독스를 의미

□ 그레이 존 분쟁(Greyzone Conflicts)

- 전면전으로의 비화를 전제하지 않고 벌어지는 다양한 저강도 분쟁 형태를 의미

□ 북한은 지난 4-5월 김정은 잠행 기간 동안 전략적 대책을 준비해 온 것으로 판단됨

○ 역외타격 능력 운운하며 북한식 반접근전략의 교리를 준비해 온 인상

- 3월 21일 미사일 실험 직후에 “어떤 적이든...령토 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력” 운운하여 현재 군사 실험들이 ‘역외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한 것도 그것의 한 일환으로 판단됨

○ 김정은이 5월 잠행을 끝내던 24일 공개한 당중앙군사위에서 “전략 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the strategic armed forces on a high alert operation)” 운운한 것도 유사하게 해석 가능

- “on a high alert” 라는 표현을 실전배치에 사용하는 용례라고 해석하는 분석도 제기
- 동 회의에서 리병철을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박정천 총참모장을 차수 임명하는 등 조직 변동을 발표

2. 우리의 대응 방향

□ 북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2015년 8.4(목함 지뢰 사건)이후 8.25 합의와 같은 협상 패턴이라면 이에 대한 전면적 대비가 필요함

○ 북한은 2015년 당시 8.25 합의 이후 10-11월 남북정상회담을 논의하다 그것이 불발로 끝나자 결국 2016년 1월 6일 5차 핵실험으로 이어짐

□ 2015년 하반기 과정

- 8.4 목함지뢰 -> 8.25 합의 -> 9.3 박근혜 방중 망루외교 -> 10월 10일 류원산 방북

-> 10월 17일 한미정상회담 -> 11월 방기문 방북 무산 -> 12월 모란봉 베이징 공연 취소 -> 12월 12일 남북 차관급 회담 결렬 -> 1월 6일 핵실험

□ 현재 6월 위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응징 억지, 무시 전략, 그리고 평화구매 전략 3가지임

○ 응징억지 전략은 한국이 재래식 분쟁을 불사한다는 의지를 표현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J-커브 상의 깊은 눈물의 계곡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음

- 안보-안보 부재 패러독스와 그레이 존 분쟁에서의 비교우위를 고려해야 함

- 응징억지 전략은 이명박 정부 시기나 박근혜 정부 말기의 3축 체제 하의 대결 정책으로의 회귀이고 정부 철학의 변화임

○ 최대한의 무시전략은 부작위(inaction) 전략으로 한국형 전략적 인내 전략이 될 것임

- 정부가 채택하기 가장 손쉬운 전략이지만 사실상의 현상유지 전략으로서 10월 미국대선을 목표로 한 북한의 에스컬레이션 과정을 버틸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단점이 있음

- 북한과의 내구력 싸움에서 중국 변수가 통제되어야 한다는 단점도 있음

○ 어차피 북미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한 현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면 보상에 의한 억지(deterrence with(or) by promise)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유연한 전략이 될 수도 있음

- 위협에 굴복, 유화(appeasement), 퍼주기 등의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음

□ 어떤 상황에서도 남북 협력이라는 초심을 놓쳐서는 안 됨

○ 6월 위기 돌파를 위한 3가지 정책 제시가 필요

- 8월 군사연습 문제 해결

- 인도적 협력 사업을 실행

* 쌀, 비료, 보건협력의 3대 의제를 설정

- 한반도 평화 특사의 설치가 필요

○ 대북 인도적 협력 사업에 대한 국내 퍼주기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필요

- 퍼주기가 아니라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이라는 개념 확산

- 북한은 이번 성명전의 와중에 느닷없이 6월 8일 정치국 회의를 소집하여 첫 번째 안건으로 비료 문제를 거론

* 만일 보상이라는 수단을 검토한다면 큰 규모(쌀 50만톤, 비료 30만톤 등)를 염두에 두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 주호영 의원의 페이스 북에 따르면 북한은 보수 정부 시기 줄곧 쌀 50 만톤, 비료 30 만톤 정도의 지원 규모를 요구해 왔다고 함

□ 북한의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예정된 대남책을 유보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계기이므로 이 계기를 살려 대북 협상의 실마리를 살려야 함

○ 대남 조치를 ‘유보’ 하였다는 표현에 유의하여 속도감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자주 역설과 퍼주기 논란을 극복할 계기

- 한미동맹으로부터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남북 관계에서 안보딜레마를 작동시켜 북한의 대남 경계심을 더욱 자극하는 상황

* 최근 한국 정부의 방위비 증대, 최신 무기 도입 등이 현 사태의 한 원인이라는 점을 감안

<발제2>

남북관계 위기 평가와 북한의 예상 행동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남북관계 위기의 본질

□ 대북전단 살포가 이유가 아니다.

○ 북은 과연 전단 살포를 대단히 심각한 정권이나 체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나온 것일까?

-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전단 살포가 효과적이라는 반증이라고 하나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님.
- 전단 살포가 엄청난 위기감이나 공포감을 준다고 보다는 최고 존엄에 대한 참을 수 없고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이고, 경제중심의 정면돌파전을 강요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안보적 우려와 혼란을 생산할 수 있음.
- 과거 심리전과 체제경쟁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전단 살포와 달리 최근 대북 전단은 일부 탈북단체들의 주도하에 내용적으로도 악의적이고 비윤리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의 거부 반응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음
- 남쪽을 향해서는 엄포, 소위 블러핑이자 전단 문제가 4.27 판문점 선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대남 조치와 군사적 행동을 시작하는 명분과 빌미를 제공

○ 하노이 노딜 이후 누적되어온 남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전단살포로 발화된 것.

- 단순히 전단 살포에 대한 불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운함과 섭섭함을 넘어 누적된 불만을 표출할 명분과 기회를 찾고 있던 차에 전단 살포가 걸려든 것
- 지금의 상황은 전단 살포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결음도 나아갈 수 없으나 그렇다고 전단 살

포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님

□ 대북전단 살포가 시작이 아니다.

- 대북전단 살포문제로부터 현 상황 관련 조치가 계획된 것이 아니라 하노이 노딜 이후 4월 시정연설을 하고 연말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정면돌파전 차원에서 준비해 온 정교한 대외로 드맵 중 대남 분야는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로 시행
- 2020년을 김정은 정권 유지에 대단히 중요한 한해로 보고 제재국면 하에서 북미관계와 남북 관계 없이 자력갱생 하 경제발전 성과를 이루어 내기 위한 대내외적 전략을 사전에 수립
- 이번 행동 개시 이전 이미 여러 차례 징후와 전조가 있었으며 지난 3월 김여정 담화부터 이미 행동으로 전환이 시작된 것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북한의 조급함이나 대화 요구로 오독
- 최근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북전단 관련 군중집회와 북한 내부 언론 공개 등을 보더라도 오히려 경제 중심의 정면돌파전을 더욱 다그치기 위한 내부 결집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미 준비된 정교한 로드맵이 있는 것으로 보임

2. 북한이 지금 왜 이러지?

□ 제재 그리고 코로나, 북한이 어렵다?

- 제재와의 대결 국면에서 경제전선을 기본으로 한 정면돌파전이 코로나 사태와 겹치면서 더욱 어려워진 상황은 분명하지만 김정은 정권의 유지와 안정성 차원에서 중단이나 전면 수정은 불가한 상황
- 경제개발 5개년 전략 성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일부 계획이나 목표를 수정할 수는 있으나 경제전선을 기본으로 한 정면돌파전 자체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임.
- 그렇게 되면 김정은의 통치력에 대한 의문과 정권의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2020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제적 성과를 포장해 당창건 75주년 성공과 내년 봄 제8차 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갈 것임.

- 계획 파기 및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과 책임을 남한과 미국에게 돌리고 경제 정면돌파 전 한계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실제 북한이 제재와 코로나로 인해 어떠한 상황인지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북한이 조급해져서 단순히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다거나 부족한 경제성과를 안보적 성과로 대체하고 안보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평가 역시 근거가 부족함

- 북한이 미련을 가지고 대화에 매달리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북한은 지금 그럴 겨를이 없음.

□ 오히려 북한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 북한의 경제 중심의 정면돌파전을 해오면서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코로나에 대한 대처도 그렇고 경제적 측면도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예상

- 추가적인 장애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올해 당 창건 75주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 8차 당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최소한의 성과는 가능한 상황을 만들려고 내부에 집중하는 대내적 차원의 정면돌파전을 진행

- 경제발전에 올인 할 수 있도록 안보 우려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것, 되지도 않는 북미관계 중재나 제재 눈치 보며 주저주저하는 지원 협력 타령하지 말고 그냥 북 스스로 알아서 할 테니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는 간절함

○ 대내적인 경제노선 중심의 정면돌파전을 제약하는 장애물 발생에 따라 사전에 준비해 둔 대외대남 차원의 정면돌파전 시행으로 내부 결집

- 단순히 전단살포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김정은 건강이상설과 같은 가짜뉴스와 탈북민 국회의원 당선, 우리의 F-35 도입 등 국방력 증강, 한미연합훈련 지속 등 남한의 ‘은폐된 대북 적대행위’가 자신들의 경제 중심의 정면돌파전에 장애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

- 경제적 성과의 부족을 돌리거나 조급함에서 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제노선 중심의 정면돌파전을 진행하는데 있어 인민들의 반응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참고 그냥 넘기기에는 어려운 대외적인 장애물이 만들어지고 이에 대한 대응이 없으면 인민들을 결속하고 다그치기 어려

운 상황으로 인식

□ 김정은 방식대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새로운 판짜기의 시작

○ 2018년부터 시작된 지금까지 남북/북미관계 경험을 통해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 가능성

- 70년 이상 지속되어온 분단체제 하 남북관계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변화를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에 과도하게 기대한 탓에 하노이 이후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 트라우마와 정권의 불안정성을 경험

- 향후 남한과 미국에 지금보다 더 북한에 유연하고 접근 가능한 정권의 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역시 과거 김일성/김정일 시기와 차별화된 김정은식 새로운 틀을 정립하려는 의도 내포

○ 경제전선 중심의 대내적 정면돌파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외적 정면돌파전의 시행

- 2018년부터 이어온 남북/북미대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잘못된 길이었음을 깨닫고 지름길이 아닌 ‘정면돌파전’을 선택

- 지난 전원회의에서 밝힌 대로 현 북미상태를 자력갱생과 제재와의 대결로 규정하고 미국과의 장기적 대립과 제재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점

- 공세적 외교(대외자주)와 핵무력 강군화(국방자위)를 바탕으로 한 대외적 정면돌파전 진행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우려

3. 북한의 예상되는 행동

○ 6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며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하면서 말에서 실제 행동으로 전환을 예고

○ 연락사무소와 개성공단 철거와 남북군사 합의서 파기는 남북관계를 4.27이 아닌 6.15 이전으로

로 회귀시킬 가능성

-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4.27 정상 간 합의이자 평화의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라면 개성공단은 6.15 이전과 이후로 구분되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역사의 상징
- 남북군사합의서는 9월 평양선언과 함께 체결 된 것으로 남북한 주민의 일상에서 평화를 찾아주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남북관계를 한 단계 올려놓은 이번 정부의 최대 성과이자 치적

○ 이미 남북 간 모든 연락선 차단 이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총참모부 행동을 예고

- 총참모부는 다음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① 금강산관광지구와 개성공업지구 부대 재배치, ② 비무장 내 철거 GP 재설치, ③ 군사완충구역 파기, ④ 북한 주민의 대남 뼈라 살포 지원이라고 밝힘

□ 개성공단 철거와 남북군사 합의서 파기

○ 총참모부가 언급한 ①번은 기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군부대 재배치로 결국 개성공업지역 완전 철거로 연결

- 수도권과 인접한 개성공단에 북한 군부대 특히 방사포 등 포병부대가 재배치되는 것에 대해 ‘서울불바다’를 우려하며 과대하게 군사적 위협의 증가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은 과거에 북한 군부대가 있었던 곳이고 특히 개성의 경우 장사정 포병부대가 설치된다고 해도 지형적으로 오히려 선제타격이 용이하고, 최근 200km 이상의 신형 초대형 방사포까지 개발한 북한이 개성과 같이 군사분계선에 근접해 포병부대를 배치해야 수도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②,③번의 경우 2018년 9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군사적 긴장해소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완충구역 및 DMZ 비무장화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다시금 군사적 긴장 및 우발적 충돌 가능성 상존

- “북남합의에 따라 비무장화된 지대“란 정전협정상 비무장지대(DMZ)가 아닌 기존 남북 합의와 군사합의서로 인해 만들어진 것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지역과 JSA 그리고 철거된 GP 지역 및 군사합의서 1조의 지상 해상 공중의 완충구역을 포괄

- 특히 군사적 긴장완화와 우발충돌방지가 지난 9.19 남북군사합의 1조와 2조의 지상해상공중의 완충구역 및 JSA, DMZ 지역에 관련된 상호적대행위 중지 조치를 파기
-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이제 한반도에는 더 이상 전쟁의 공포가 사라졌다고 한 남북 간 실질적 종전선언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으로, 단순히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보복에 그치지 않고 남북 정상 간 합의사항의 미이행이 주는 결과를 분명히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확대 해석

□ 북한군의 주민 대남 뼈라 살포 지원 및 대남 확성기 재설치

- ④번은 우리 골머리가 아프게 하면서 북한주민의 분노를 다소나마 식혀줄 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뼈라 살포를 북한군이 지원하는 새로운 상황 전개 가능성에 주목
- 북한은 대남 뼈라 살포 그 자체만으로 대남 선전선동 효과를 노리는 것은 아닐 것임. 오히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우리의 대응을 어렵게 하고 접적지역과 해역의 긴장을 고조시켜 결국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지 않게 되는 후과를 강요하려는 의도
- 지상이나 해상에서 군사분계선 또는 NLL에 북한 주민(위장)이 대남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다양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준비가 필요
- 예를 들어 북한 어선들 수척이 뼈라를 뿌리기 위해 NLL에 접근하고 넘기까지 한다고 가정하고 뒤흘에는 북한 경비정이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인근 해안포와 지대함미사일을 꺼내놓은 상태에서 과거 6월 꽃게철에 있었던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
 - * 과거 1980년대 동해상에서 북한의 간첩선 의심선박을 격침한 적이 있었음. 북한 선박이 접근하는 우리 함정에 먼저 총을 발사했기 때문인데 이후 북한이 어선이라며 국제재판을 걸어 우리가 패소
- 지상 군사분계선 인근에서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짐. 북한군이 아닌 북한 주민이(실제 자발적인 주민일 가능성보다 주민처럼 위장한 군인일 가능성)라면 우리가 군사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자칫 군사적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

□ 새로운 전략무기와 무장의 현대화는 이번 것과는 별개로 지속 진행

- 최근 싱가포르 2주년에 있었던 리선권 외무상 담화는 실제 SLBM 발사와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든 행동으로 가려는 것으로 평가
 - 싱가포르에서 악수한 손을 계속 잡고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에 의문이 든다며 이제 트럼프 정치적 치적 쌓기는 안할 것이라고 언급
 - 당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확대회의 국가핵발전전략과 핵전쟁억제력 강화를 주장
- 미 당국이 평남 평성 사인리에서 ICBM을 실은 이동식발사차량(TEL) 4~6대가 시험주행 중인 것을 포착,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군사퍼레이드에서 새로운 ICBM 공개 가능성

4. 남북관계 위기 타개를 위한 제언

□ 유연하고 우회적 Tit for Tat

- 북한의 말과 행동에 대해 건건이 민감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
 - 무시한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적절치 않으나 모든 말과 행동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반응의 수위 조절이 필요
- 존중과 배려가 없는 대북정책과 인식은 상대에 대한 증오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문제 제기나 행동에 보다 담대하면서 우회적으로 대응
 - 오히려 북한이 제기한 분야와 동떨어진 것에 대한 선제적 일방적 조치를 통해 북한의 행동의 속도나 수위를 조절할 수 있음

□ 제한된 손상(Limited Damage)과 삼중딜레마(trilemma)의 극복

- 한미간의 갈등 요소와 남남 갈등을 선제적 논의를 통해 제한된 손상(Limited Damage)으로 유도함은 물론 빠른 회복력을 보일 수 있도록 갈등 및 위기관리가 필요
 - 삼중딜레마(trilemma)라는 결정론적 사고에 갇혀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은 장애물이 한미동

맹과 남남갈등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됨

○ 현 남북관계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미국 때문이라는 현실적 제약을 탓하는 것은 북한의 남한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지우는 것임

- 남북관계와 제재 사이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용기와 상상력이 필요

○ 북한의 근본적 의도가 남북/북미관계 새판짜기라면 대선 이후라도 북미관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북미관계와 연동된 남북관계가 아닌 이제 북미관계 없는 남북관계를 고민해야 할 때임

□ UNTACT 남북관계

○ 코로나 사태는 남북관계에 위기이자 새로운 기회를 제공

- 코로나에서 경험한 UNTACT(비대면, 비접촉)를 접목하여 남북대화과 접촉이 없는 남북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로 남북관계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할 골든타임

- UNTACT(비대면, 비접촉) 남북관계는 공동체의 반대가 아닌 남북공동체 형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 탈상호주의, 탈수혜주의, 탈협오주의, 탈성과주의를 바탕으로 일방적·선제적 행동을 통한 남북 신뢰를 재형성

-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만나야만 하고 상대방과 합의해야 하고 뭔가 주고받아야 하거나 굳이 남북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상호주의에 갇힌 현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개념 정립 필요

- 어려운 북한을 도와주고 지원해야 한다는 우월 의식과 고정관념, 북한에 대한 편견과 불편한 오해를 우리 스스로 바로 잡아야 할 시기

- 무엇보다 연속성 없이 정권마다 바뀌는 대북정책과 임기 내 무언가 성과를 내야한다는 강박관념과 조바심을 버려야 함.

<토론3>

남북-북미관계 진단 및 대응방향

- 손정목(4.27시대연구원 부원장)

1. 미국의 세계 군사패권 사실상 종식

- 2018년 핵무력을 완성한 북중러의 전략적 단결에 의해 미국 단독의 핵군사패권 사실상 붕괴. 그 결과 세계 각 곳의 전쟁종식과 미군 철수 흐름 형성
- 2020.3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11개국 코로나19 대처위한 전쟁 중지 호소. 푸틴, 마크롱대통령 수용하여 지난 4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화상 회의 개최 요구.
- 미군 철수 흐름
 - 1) 아프카니스탄 평화협정 : 19년간의 전쟁 끝에 지난 2월 평화협정 체결. 14개월 내 미군철수 완료. 3월부터 미군 철수 시작. 트럼프 2020년내 전원철수 제기
 - 2) 이라크 미군철수 : 3월17일부터 키르쿠크, 모술, 알카임 미군기지 등 3개기지 철수. 5,200명 전원 철수의 시작. 6월11일 미-이라크 전략대화 미군 감축 합의 (이라크는 미군철수합의 보도)
 - 3) 사우디아라비아 미군철수 : 중동 대표적 친미국가 미군철수. 이란 위협감소 명분.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 2대와 미군 300명. 이외 2018년 바레인과 쿠웨이트, 요르단 패트리엇 포대 철수. 2019년 10월 시리아 미군철수. 600여명 유전지대 잔류.
 - 4) 독일 미군철수 : 2차대전 패전국이자 유럽동맹의 중추인 독일에서의 철수. 9월까지 9,500명 철수.
 - 5) 리처드 그리넬 전 독일주재 미국대사 (6.11) : 트럼프대통령 독일 이외 한국, 일본, 시리아,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철군(감축) 계획. 시리아, 이라크 아프칸 이미 진행 중. 남은 국가는 한국과 일본.

- 미국 전쟁 기피 양상

- 1) 2020.1 이란 미국의 솔레이나미 사령관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내 알아사드 미군 기지 등 여러 곳 타격. 미국 전쟁 확전 위협했으나 보복 포기.
- 2) 2020.5 이란 대형 유조선 5대 베네수엘라 파견. 미국 봉쇄 경고하고 이란 봉쇄하면 전쟁 경고. 결국 미국 봉쇄, 나포 포기하고 이란 유조선 무사히 베네수엘라 입항.
- 3) 트럼프대통령 미 육사 졸업식 연설(6.14): ‘먼 나라 갈등 해결 미군 책무 아니다’, “끝없는 전쟁(Endless War)의 시대를 끝내겠다”,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아니다“

2. 정면돌파전에 대하여

- 현재의 남북관계 긴장을 북의 경제위기나 경제건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조건에서 김정은위원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무마하기 위하여 남북관계 긴장 국면을 조성했다는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주장. 기타 김여정 제1부부장 2인자 부각, 체제 단속 및 내부 결속력 강화 등 상투적 주장 모두 근거 없음.
- 무엇보다 북이 정면돌파전의 기본전선인 경제 건설이 위기에 빠졌거나, 경제개발 5개년전략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근거가 전무. 북은 단 한번도 그 같은 평가나 비슷한 언급조차 없었음. 그럼에도 남측의 전문가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코로나19 창궐에 의한 봉쇄 격리로 세계가 경제 위기에 빠지자 북도 그럴 것이라는 추론에 불과.
- 거꾸로 북이 경제발전에 올인할 수 있도록 안보문제를 만들지 말아달라는 간절함 때문에 현 사태가 빚어졌다는지, “경제노선 중심의 정면돌파전을 제약하는 장애물 발생에 따라 사전에 준비해 둔 대외 대남 차원의 정면돌파전 시행으로 내부 결집”이라는 평가 역시 표현만 다르지 북이 내부의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의 긴장 상황을 조성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이런 평가는 정면돌파전을 경제문제 해결로 바라보는 협소한 해석.
- 6.23 군사행동 보류 결정도 이런 시각으로 ‘경제중심 정면돌파전 매진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대외적 긴장 고조와 위기 국면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 이라고 평가한 것 역시 제한적.
- 북의 정면돌파전 목표는 세계 비핵화와 사회주의 강국 건설. 교착상태의 장기성이란 이러한 목표 실현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 군사적 위협이 끝이 나지 않을 것임을 의미. 이는 ① 미국이 세

계적 핵 군축과 전파 방지를 위한 우리 노력에 찬물 ② 핵문제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다른 무엇을 표적으로 정하고 군사정치적 위협은 끝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데서 확인. 정면돌파전은 전략 노선. 그렇기 때문에 정면돌파전은 남북, 북미간 지지부진 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경제 건설에 집중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

- 정면돌파전의 당면 목표는 적대세력들의 제재 압박을 무력화시키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활로를 여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라의 경제토대 재정비. 경제발전과 민생생활에 필요한 수요충분한 보장(기본전선으로서 경제전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 긴장고조는 대북 적대정책 폐기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정면돌파전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임.

- 정면돌파전 승리의 중요 담보

- ① 군사적 공세 : 1.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가 철회되고 조선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전략무기개발 중단 없이” 진행. 더 이상 핵시험, 미사일 시험 중지 약속에 매어있지 않겠다. 2. “감히 무력 사용할 엄두도 못내게” ‘무적의 군사력 보유, 강화.’ 3.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폐기가 없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 4. “강력한 핵억제력의 경상적동원태세 항시적 유지, 억제력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조선 립장에 따라 상향조정될 것” (2020.5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재확인) 5.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 실제행동으로 넘어갈 것. 6.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무기 목표

- ② 외교적 공세: 우리국가의 전략적지위와 위상에 의거하여 대국적 자세에서 외교전, 책략전을 배심있게 전개해나가야 한다“- 핵무력 완성국으로서의 대등한 외교, 책략전.

3. 남북관계 재정립

3-1) 왜 남북관계 먼저인가.

- 현재의 한반도 위기는 미국의 퇴조와 전쟁종식 흐름이라는 세계적 변화에 의거해 한미간의 공고한 사대주의적 관계를 끊고 남북간의 자주적 발전과 관계 재정립.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정면돌파전.
- 핵심은 대남관계를 대적관계로 전환한다는 것. 이는 상대를 무너뜨리거나 굴복시킨다는 의미.

여기에는 북이 ‘대적군사행동’이라 표현하듯이 군사적 대응도 포함. 이는 지난해 4월 김정은 위원장 시정연설에서 ‘남조선군부 호전세력들의 무분별한 책동을 그대로 두고 북남관계진전이나 평화변영 절대 이를 수 없다’는 발언에서 확인.

- 이에 북은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군사부문에서 ICBM같은 전략무기보다 신형대구경방사포, 신형유도탄 등 한반도 내외지역을 대상으로 신무기 시험 실시. 죽집계 식 정찰타격 무기 공개. 이는 북이 지난해부터 주한미군을 비롯 외부에서 한반도로 파견되는 군사력을 대상으로 훈련을 전개했음을 의미.
- 북은 트럼프정부가 국가주의로 세계경찰을 포기하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거센 도전으로 이를 제대로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정부를 바로 겨냥하기보다 먼저 남측에서 남북, 북미 공동선언을 파탄내려는 세력을 대상으로 정면돌파전 실시하는 것으로 보임. 이들은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미국산 최신무기 도입, 지속적 빼라 살포. 김정은 위원장 사망설, 중태설 유포 등 남북, 북미공동선언 파탄내기 위한 적대행동 지속. 이에 대해 인민무력부는 5.7 남측군부의 한미연합공중훈련 등 적대행동에 ‘적은 역시 적’이란 답화.
- 이러한 공동선언 이행 방해와 파탄으로 유도한 제도적 틀이 한미위킹그룹. 김여정 제1부부장은 이에 대해 “상전이 강박하는 《한미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덩석 받아물고 사사건건 북남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돌아온 것이라고 비판. 결국 현재 남북관계 파탄의 주범은 한미위킹그룹. 이의 해체가 주요 관건.

3-2) 왜 전단 살포문제인가

- 주목할 점은 여러 가지 남측의 합의 위반 사항 가운데 전단 살포문제를 직접 계기로 삼은 것. 이는 전단 살포가 미국의 직접적 사주와 자금 지원에 의거한 것이기 때문. 이의 폭로는 여론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국민적 요구와 압박에 의해 이를 끊어내는 것을 고리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내려는 방향.
- 전단살포 문제를 계기로 나온 북 군 총참모부의 4대 군사행동계획은 실행시 필연적으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 높아짐. 결국 미군의 개입 여부가 문제. 이에 대해 북 외무성은 미국에 대해 끔직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거든 ‘민족내부 문제에서 빠질 것’ 요구. 이미 북은 지난 5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더한층 강화하고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영’하기 위한 새 방침을 세운 바, 이는 예상되는 미국의 개입에 대한 핵을 비롯 강력한 전략 무력대응을 천명한 것임. 결국 미국 개입 포기 유도.

- 6.23 북의 대남군사행동계획 보류조치는 6.17 조선중앙통신이 “우리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를 지켜보면서 차후 처신, 처사 여부에 따라 연속적인 대적행동조치들의 강도와 결행시기를 정할 것”이라는 보도에서 확인. 즉 문재인정부의 사대주의를 벗어난 처신과 처사 촉구하고, 이를 위한 거의 마지막 시간을 준 것. 나아가 “지금과 같은 예민한 국면에서 남조선 당국의 파렴치하고 무분별한 태도와 대응은 우리의 보다 강경한 보복계획들을 유발시킬 것”이라는 경고는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엄중히 대응할 것을 요구한 것.
- 다른 한편 이례적인 중앙군사위원회 화상 예비회의 소집, 설치된 확성기의 즉각 철거, 각계의 비난입장 보도 중단 등을 두고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 미국으로부터 모종의 메시지 전달이라는 추정도 있음.
- 북은 정면돌파전 1차 결속을 10월10일 당 창건 75주년에 맞추고 있다고 보임. 당 창건일을 “조국청사에 특기할 대승리로 성대히 경축”

3-3) 대응 방향

- 현재의 보류상황은 극적인 돌파구를 여는가 아니면 더 큰 군사적 대결로 나아가는가의 분기점.
- 문재인 정부의 결단력 있는 한미워킹그룹 해체, 한미연합훈련 중단, 미국무기 도입 중단, 개성, 금강산 재개, 뼈라살포 중지법 제정, 판문점 선언 비준, 국보법 철폐 등 진정 사대주의를 벗어난 정책 시행 요구됨.
- 핵심은 문재인정부가 얼마나 자주적 입장과 방책을 내놓는가에 달렸음. 여기에는 방위비 타결을 거부하고 미군 감축을 용인하는 것도 포함. 이렇게 볼 때 2020년 7월은 역사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임.

<토론4>

남북관계 악화의 원인과 대안

유영재(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1. 남북관계 현 사태의 직접적 원인 제공자는 문재인 정부

- 대북 전단 살포는 확성기 방송과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음.
- 2014년 10월,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남북 간 총격전이 벌어지고 전쟁 위기를 맞은 바 있음.
- 대북 적대적 입장을 취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을 근거로 11차례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바 있음. 주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음. 대북 전단 살포 중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음.(대북 전단 살포 중단 : 60.6%, 계속 : 39.4%, KBS, 2020. 6. 14)
- 무엇보다도 대북 전단 살포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약속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 위반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지킬 적극적인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줌. 이번 사안에 관한 한 미국에 핑계를 대는 등의 변명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
- 따라서 현 사태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명백히 문재인 정부가 탈북자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지 않은 데 있음.
- 심지어 김영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멀지 않아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태도 없이 무너지는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될 것”이라고 명확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6.15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축사와 수보회의를 유체이탈 화법에다가 그 자리에서까지 ‘국제사회의 동의’ 운운하면서 허비해 버림으로써 위기 국면을 반전시킬 기회를 날려버림.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외교안보 진용의 사태 인식이 매우 안이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을 보여줌. 현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정의용 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을 대북 특사로 제안한 것 역시 마찬가지임.
- 나아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도로 연결뿐만 아니라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마저 미국과 유엔 핑계를 대고 진척시키지 못한 것도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반북수구세력의 눈치를 본 결과임. 현 사태의 배경에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극도의 배신감과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 또한 명확한 사실.

2. 북의 과잉대응은 사태를 악화시키고 남북 관계회복을 어렵게 해

- 김여정 제1부부장과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8일 대남 사업 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아일보, 2020, 6, 10)고 강조하고, 통전부장이 “적은 역시 적” (통일뉴스, 2020. 6. 17)이라고 규정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방식으로 폐쇄한 것은 남쪽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과 상처를 줌. 이는 우리 국민의 대북 불신을 가중시켜 향후 남북관계 회복을 어렵게 할 것.
- 북은 금강산·개성지구엔 연대급 부대·화력구분대 배치, 비무장지대 GP 재진출, 전선 경계근무 격상, 대남 뼈라 살포를 예고함. 이 같은 조치는 ▲북 스스로 판문점/평양선언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으로서 그 목적성(남에 대한 판문점/평양선언 이행 요구)을 의심케 하는 조치임. 이는 ▲남이 판문점/평양선언을 이행할 수 없도록 하고, 그 책임을 북에 돌리는 빌미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충수라 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조치는 ▲남쪽 국민의 대북 불신을 더욱 심화시켜 향후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에도 중대한 장애물을 놓는 일임.
- 김정은 위원장(당 중앙군사위)이 대남 적대행위를 보류시킨 것은 남북관계를 파탄 일보직전에서 멈춘 것으로서 불행 중 다행임. “조성된 최근 정세를 평가” 한 내용은 ▲남쪽에 대한 극약처방 효과(통일부장관 사퇴, 대북 전단 살포 단속), ▲과도한 대응의 역효과 우려(남북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 부담, “자력갱생식 정면돌파전” 집중 방해), ▲남북 간 모종의 소통 가능성 등으로 추정됨.

3. 남북관계 악화의 근본원인을 제공한 것은 미국

- 미국은 9.19평양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발표 이후 한미위킹그룹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통제함.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를 무시하고 사실상 북에 대해서는 선 비핵화를 강요하고 남에 대해서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병행 추진의 구실 아래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등 판문점/평양선언 이행을 틀어막음. 심지어 대북 인도적 지원마저 가로막고 세계 여러 나라 국민들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금강산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것조차 지척에 있는 동족은 가지 못하게 가로막음.
- 미국이 북에 대해 선 비핵화를 요구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분단과 남북대결의 지속을 통해 동북아에서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유지하려는 것임.

4. 요구와 대안

- 남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사과하고 외교안보진용을 전면 개편하며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또한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미국과 반북수구세력의 눈치 보지 말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하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시작함으로써 판문점선언/평양선언의 실질적 이행에 나서야. 특히 천만다행으로 북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들을 보류” 한 상황을 엄중히 평가하고 기왕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에서 환골탈대하여 신속하게 전향적인 대응에 나서 간신히 열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함.

- 북은 더 이상의 대남 적대적 조치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제기하고 대안을 도출해야 함.
- 미국은 남쪽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고, 북에 대한 선 비핵화 요구 중단하고, 대북 제재 해제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적이고 단계적으로 실행해야 함.